

“윤석열-방상훈 만남 의혹 ‘감찰 진행중’”

추미애 법무부장관, 종합감사서... 윤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에 “선 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감사 발언을 두고 “선을 넘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남을 가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부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진에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인 법무부장관을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인다.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며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감찰 제도를 실효화해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

며 “모든 행정에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 총장이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울러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저도 부하라는 표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종합감사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지리하고 있다.

생경하다.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사무 전반 등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달 윤 총장에 대해 감찰해달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의정 소식

김철수 도의원, 대기업 감질 피해기업 구제방안 촉구



전북도의회가 대기업 감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감질 피해를 당해 공정부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피해기업은 가나니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분하면서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건의안 발의 배경을 보면 8년 전, 전북 소재 중소기업 A기업이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내몰린 사례에서 비롯됐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업 감질 피해 중소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청와대와 공영위, 중소벤처부, 해당 대형마트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송성환 도의원, 중장년 일자리 촉진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조례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를 위한 청년기본조례와 고령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중간층인 40~50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와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4060신중년 취업지원과 경력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70억원 가량을 해마다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최영심 도의원,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건담회 열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26일 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현재 초·중·고교 교사 40여 명과 도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건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강사들은 “2년 계약이라는 짧은 고용 기간과 계약에 대한 채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고용 불안정성만 높아지고 있어 갈망이 깊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체육수업 실패조사 시 스포츠강사의 평가 주체는 교장과 학생부장”이라며 “불시 방문 등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근 3년동안 성범죄 저지른 경찰 86명

해임이 40명으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무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청과 소속 직원 8명 중 6명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학생을 강제추행 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청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전북학연연구센터는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마한의 본향 전북, 역사문화특별법에 포함을”

전북학연연구센터,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학술대회 “유물 등 고고학적 연구 통해 증명하는 자료 밝혀져 현재 특별법, 영산강 유역 중심의 전남으로 국한”

마한의 시작지이자 중심지인 전북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특별법) 상 마한권역에 포함하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본격화됐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특별법은 마한 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으로 국한하고 있어, 올바른 역사의 복원과 전북의 고대사 위상 재조명을 위해 전북도는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연구원 전북학연연구센터는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문화특별법 상 전북이 마한권역의 설정에서 제

외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마한의 시작지이자 중심지였던 전북의 역사를 강조하고 조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술적, 논리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의 마한역사문화권 포함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원규 교수는 “중국과 국내의 사료 등 문헌 기록과 무덤형식, 유물 등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전북이 마한의 분항임을 증명하는 실체적 자료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특히 익산지역은 마한의 고도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의 역사문화특별법은 마한을 영산강 유역 중심의 전남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전남지역만의 마한 역사문화유적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면 자칫 소지역주의에 치우쳐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올바르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마한의 성립과 관련된 전북지역 마한의 역사문화유적을 반드시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특별법’은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은 백제와 가야 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만 포함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전북지역의 마한사 연구, 발굴, 복원 등은 사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1년 6월 해당 법의 시행에 앞서 학술대회,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마한 문화권에 전북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학술대회 발표집은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산재

소송 제기율 평균 45%대

민주 안호영 의원 “인정기준 폭 넓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뇌심혈관계질환과 관련,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제기율이 평균 45%, 패소율 또한 2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판정지침에서 업무시간의 길이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가중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으로 소송에서 14건이 패소한 사실이 조사됐고, 둘째로 업무 과중 요인이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과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축소 또는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이에 부정하는 판단으로 소송에서 7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을 인정하거나, 또 평소 신체조건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해 2019년, 2020년에 소송에서 9건의 패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이하, 판정지침)’을 운영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시키지 않고 재해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율을 줄이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 지침 개정분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공단이 패소한 사건들에서는 공단의 판정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산재 승인심사에서 잘못된 지침을 계속 적용해서 여전히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불승인함에 따라, 재해노동자나 유가족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 하는 일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반복되는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과로사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최근 10년간 원유·유제품 수입 10조원 달해

민주 이원택 의원 “낙농가 판매가격 보전 등 통해 낙농업 살려야”

최근 10년간(2009~2019) 원유·유제품 수입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원유) 우유자급률이 지난 2009년 69.5%에서 2019년 48.5%로 10년간 21%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원유 수입량은 95만9,125톤에서 23만3,965톤으로 140.2% 증가했다.

이와 2009년부터 2019년 원유·유제품 수입액은 90억불(현재시세 10조1,655억 원), 수출액은 17억불(현재시세 1조9,200억 원)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5.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2026년이 되면 한·미 FTA 따른 유제품 수입관세가 철폐돼 유제품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유제품은 지속 가능한 식품체계를 위한 식단의 필수 요소인데 수입산 유제품이 지속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 국산 유제품소비량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제품 원료공급처인 국내 젖소 사육두수는 지난 2009년 44만두

에서 2020년 6월 40만두로 8.2%감소했고, 낙농가수도 같은기간 6,767호에서 6,186호로 8.9%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낙농업계는 원유수급 조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가 지속 장기화 되면 유업계의 잉여유 처리 곤란 등으로 이어져 국산 원유 산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원유·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산원유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낙농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낙농가의 판매가격 보전 및 유업체의 잉여유 처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해 수입제품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지는 낙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